

한·미워킹그룹, 왜곡과 진실

아산정책연구원
박원곤 객원연구위원
2020.07.13.

2018 년 6 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 부르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 직후 한국 정부는 “정확한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연합훈련 중단은 한국 정부는 물론 미 국방장관과도 사전 상의가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은 이미 잘 알려졌으나 돌발 행위를 직접 경험한 한국 정부는 당황했다. 일부에서는 1994 년 제네바 합의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다. 한국이 당사자임에도 북·미 간 협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협상 당시 옆방에서 대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귀동냥으로 상황 파악을 하던 처지가 소환된 것이다. 제네바 합의 결과로 한국은 경수로 건설 비용의 70%를 떠안았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미국과의 확실한 협력 기제가 필요했다. 2018 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도 고려됐다. 그 결과 11 월 20 일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했다. 당시 청와대는 한·미워킹그룹 의제로 한·미 간 외교 공조, 비핵화 노력, 대북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 등 총 4 가지를 제시했다.

한·미워킹그룹은 그간 북한 비핵화 로드맵 구축 과정에서 한·미 간 최대치의 협력을 도출했다. 2019 년 1 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 스탠퍼드대에서 발표한 ‘포괄적 비핵화, 단계적 이행’ 방식의 비핵화 로드맵은 워킹그룹에서 숙의를 거친 한·미 합작품으로

알려졌다. 2018 년 10 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에 미국이 준비해 간 안도 한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국내 일부에서는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 부부장이 지난달 17 일 담화에서 밝힌 '상전(미국)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 남북 관계를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국내 일부에서도 수용하는 모양새이나 이는 사실의 심각한 왜곡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워킹그룹으로 남북협력 사안에 반대한 적은 없었다"고 밝힌다. 워킹그룹에서 최종 제재 면제가 이뤄진 남북협력 사업 12 건 중 8 건은 북한이 응하지 않아 중단된 것임이 확인된다. 외교부는 워킹그룹을 "제재를 빨리 푸는 방식"이라며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워킹그룹이 없다면 한국은 제재 면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등을 찾아다녀야 한다. 통상 '대북제재강화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2016 년 2 월 발효된 이래 2017 년 더욱 강화됐고 2020 년에는 '오토웨이비어법'도 통과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 3 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이 포함된 강력한 법안이다. 예를 들어 북한 개별관광을 위해 한국 지자체가 관광객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면 제재 대상인 북한 관광총국이 수령하게 되므로 제재에 저촉된다. 해당 지자체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달러 결제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며 관련자의 미국 방문이 금지된다.

지난 8 일 방한한 비건 대표가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변한 것은 워킹그룹 미측 대표로서 비판에 대한 억울함의 호소로 들린다. 이런데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워킹그룹을 해체한다면 한·미 비핵화 공조는 제한되고, 제재받는 한국 기업·단체·개인이 나올 수도 있다. 남북 관계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지 워킹그룹 때문이 아니다. 빈대도 없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

* 본 글은 7 월 13 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